

공수처에 '판·검사·고위경찰' 기소권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기소권 제한 반대하던 민주 "공수처 자체가 중요" 선회 김경수사권 등은 기존 기초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법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에 민주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우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이번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는 공수처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으로 그동안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정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명시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다 주지는 못해도 공수처가 사실상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인데 그 중에서 기소권 부여 대상인 판·검사, 법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충분히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받도록 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됐다고 보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

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과 심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국회법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날 합의의 내용에 대한 추진 과정을 거칠 예정이 다. /뉴스

"라돈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평화당 정동영 대표 '라돈방지 2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돈 함유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돈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돈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

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돈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돈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작년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전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저 정동영과 민주평화당은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신북방·카자흐스탄2050 연계 유라시아 공동번영 논의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두 정상은 교통·인프라·우주항공·ICT·e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악오르다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 국민 간 우호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바란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사임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

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등 카자흐스탄이 정치·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방문해 준 문 대통령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양국의 우정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이 한·중·중앙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로 설립 12년째를 맞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이 올해 하반기 개최하는 12차 포럼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 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2050 국가 발전 전략'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함께 이뤄 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2050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혁신산업화 ▲트렌드 강화 ▲농업혁신 ▲지식경제기반 조성 ▲효율적인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발전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국가기관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 신규 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통관·인프라·보건의료·관광·중소기업 등의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두 정상은 ICT·5G·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e-헬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아울러 양국 정상 임석 하에 7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수형자 이송 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다. 이 밖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MOU(현대자동차-아스타나모터스), 로봇수술기 수출 MOU(미래컴퍼니-알마티), 고등교육 분야 협력 MOU(교육부-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MOU(금융위원회-아스타나금융청) 등 20여건의 정부간·민간간 MOU가 체결됐다. /뉴스



우석대 장영달 총장이 22일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된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장영달 우석대 총장 "정의는 국민에 대한 봉사"

도의회 사무처 역량강화교육서 로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로운, 책임감, 행복감은 삼위일체이며 분리 될 수 없어서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일에 정의를 담아 임하면 전북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며 "공직자는 도민의 행복 만큼 행복하게 되는 만큼 정의로운 직무수행으로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전북의 공직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영달 총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작년 3월 우석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진성 기자

2019 정읍드론 페스티벌 2019 JEONGEUP DRONE FESTIVAL. 2019. 5. 4. (토) ~ 5. 5. (일)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 개막식 5월 4일(토) 오후 7시. 김태우, 닐로(Nilo) 출연. 주최: 정읍시, 주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